

#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소환

### 박 대통령 '뇌물수수' 주범 유력... 특검, 삼성합병 후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주목·혐의 입증 자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과 무관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고,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최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각각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팀의 압박은 한층 수위를 더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 역시 뇌물죄이며, 최씨가 공범, 박 대통령이 주범으로 적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애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만 적시됐다. 최씨 등과 공모해 박 대통령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부담감을 느낀 삼성그룹이 출연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던진 찬성표, 이후 본격화된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을 주목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주도했고, 이후 대통령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최씨에 대한 지원을 끌어냈다는 것이 특검팀이 그린 그림이었다.

관련 수사를 통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첫 소환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부른 것도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 결국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가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리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이 높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이라는 고리를 거쳐 진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 수혜자가 최씨 일가인 만큼, 특검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최씨 주변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최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태민씨의 의붓손자, 최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씨, 이영도 전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송모회' 회장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들은 최씨를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인물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조

사가 필요한 기간이 상당한 만큼 최씨 재산 형성 과정,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단서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적용 혐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문재인 "김관진-플린 회동, 탄핵된 박 정권서 할일 아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예비역 육군 중장과 만나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정지됐는데 안보보좌관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됐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마이클 크립트 스캐어를 방문해 한류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만나 "우선 외교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의 참모다. 이런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관계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 통상 분야에서 보복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에도 교육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외교는 정부간 문제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정부 간의 따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중국측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사드 경제보복'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잘못된 처사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뉴시스

## 반기문, 내일 생가·본가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귀국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반 전 총장은 14일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충북 음성, 화창시절 추억과 본가가 있는 충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고향을 다시 찾는 것은 3년 5개월 만이다. /뉴시스

## 이영선 "최순실·정호성 사이 문건 전달한 적 있어"

### "청와대에 최순실 데리고 온 적은?" 질문에 "말하기 곤란"... "최순실, 대통령과 '친분' 인지"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자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영선(39) 행정관이 청와대 기밀문건 '전달책'이라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 변호인은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자신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증인(이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줬고, 최순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전달 서류를 증인을 통해 정호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제 전달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행정관은 "문건을..."이라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제2부속실 소속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측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건 전달뿐만 아니라 최씨를 직접 차량에 태워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마치 '개인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 최순실 데리고 온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어 국회 측 변호인이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2013년 7월께 3개월 동안 '오시냐' '몇분에 오시냐' 등의 내용이 13회 정도 나왔다. 1주일 한 번 정도 같다"고 재차 묻자 "모르겠다. 추정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공식 수행업무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거의 (최순실) 사적업무를 했다"라는 질문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사적업무 내용을 물어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횡수로 본다면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심판정에서 자신의 옷으로 휴대전화를 뒤야 최씨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담긴 '의상실 영상'을 직접 보기도 했다.

그는 "영상과 같이 증인이 깎듯하게 모시는 태도 등을 비춰보면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변호인이 묻자 "(박 대통령의) 지인이고 친분이 있다는 건 인지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 특검 "김기춘·조윤선 소환, 다음주 결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뒷선으로 지목... 최경희 이대 전 총장도 곧 소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다음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또는 관리 과정의 '뒷선'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서 벌어진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 나왔고, 그 배후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중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중 김 전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이날 소환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대로 최경희 전 총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신병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회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례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와 수습차려 통화를 할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뉴시스

## 양성빈,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수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최로 열린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약속대상 수상은 양성빈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6월부터 시행된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의 입법 우수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양 의원은 발의한 생활임금조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성격으로서 생활임금을 도입, 도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입하지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조례시행에 따라 올해 전북도 생활임금수준이 시급 7,700원으로 결정된 바 있고, 올해부터는 약 818명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조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양성빈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생활민착형 입법활동에 매진해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기쁘고, 특히 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약속대상이라는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약속대상 수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 김관영, '심판방해 벌칙강화' 헌재법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을 향한 국민적 관심에 이렇듯 양도 대통령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미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김광수, 'GMO연구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김광수 의원은 12일,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하는 'GMO 연구시설 설치 기준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제의 경우 문자 그대로 신고만 하면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GMO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종자 등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통해 GMO 종자가 퍼져나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GMO 연구시설의 설치 허가 단계를 강화시켜 GMO 종자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GMO로부터 국민들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박지원, 오늘 전북 방문 표심잡기 나서

국민의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3일 전북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박 전 원내대표가 이날 각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전북 현안 및 여론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전북에 대한 인사 및 예산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만금 사업, 쌀값 폭락 대책 문제, 시군등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 정당투표를 전국 제10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 녹색 돌풍이기 때문"이라며 "호남 차별에 가장 단호하게 맞서 온 제가 호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돼 정권교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